

전북자치도 - 전북연구원 - 민주연구원, 농촌기본사회 정책 포럼

‘기본사회, 농촌부터 실현하자’

농촌생활돌봄 등
3대 핵심 전략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정책 연구’(지난해 9월부터)의 일환으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농촌기본사회’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에 앞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며, “지역사회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촌사회’가 우선적인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역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실장은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쉼터·쉼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북자치도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농촌에는 농민만 살지 않고,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실천전략을 실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성장 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혁신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은 지난해 9월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선도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기본사회와 지역사회’ 특강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반 마련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만호 기자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속가능 도시, 지자체 의지에 달렸다”

전북 백년포럼… “탄소중립 관점 마인드 필요”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7강을 열었다.

이번 백년포럼 강연자로 나선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물 부족 및 오염, 플라스틱 위험, 음식을 쓰레기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요리 매연’은 디젤 매연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여성 폐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미국 뉴욕의 요리 매연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원 대표는 “TPO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에서는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환경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은 생활, 문화, 사회, 산업의 ‘대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탄소중립 관점과 제품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인드 변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후변화/ESG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여성 폐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한정수 도의원,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사업을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해 왔던 것을 구내식당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부식비 지원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한끼 급식비가 4,0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빠르면 다음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나인권 도의원, 특장차 산업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특장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 및 인력 양성 근거가 마련됐다.



특장차 산업과 관련, 도내에서는 특장차 전문기업 29개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단지를 이루고 있다.

조례안은 △대학 및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연구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만호 기자

“尹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 위헌·위법”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탄핵 정국 속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현 탄핵 정국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면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무위원들이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고,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하면서 해경청장 인사

는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공기업)와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는 각각 지난 2월 8일과 24일 기관장 모집 공고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탄핵 이후에 갑작스럽게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는 특정 인사를 기관장에 앉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장관 주관)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무기관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핵 정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사 절차는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밀어주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까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밀어주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0곳에서도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월 14일 모집 공고를 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후보추천을 마쳤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송미령·강도형 장관 등 12.3 내란 부역자들은 즉각 불법적인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막판 알박기 인사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호 기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 해소

민주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취에스알)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취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일(승차일 기준) 열차부터는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만호 기자

수입농산물 심의 권한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전문가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

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호 기자